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문정복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9489
----------	------

발의연월일 : 2021. 4. 14.

발 의 자 : 문정복 · 서영석 · 김민기
김승원 · 한준호 · 홍정민
정성호 · 김주영 · 박상혁
설 훈 · 오영환 · 이용우
윤호중 · 김상희 · 김용민
백혜련 · 윤후덕 · 임종성
강득구 · 김영진 · 송석준
고영인 · 최종윤 · 김병욱
전용기 · 이소영 · 이재정
이규민 · 정춘숙 · 심상정
김남국 의원(3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과도한 도시화 현상에 따른 주택난·토지난 등의 문제가 대두되는 상황에서, 광역버스는 수도권 주민들의 교통수요 해소에 상당부분 기여하고 있음. 그럼에도 2개 이상의 광역시·도에 걸쳐 운행하는 특성을 고려하지 못하여 광역버스운송사업에 대한 정부 차원의 재정지원이 미흡한 상황임.

이에 광역버스에 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지원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법률에 직접 규정하여 광역버스 사업의 안정적 운영을

지원하고, 국민들의 교통편의를 증대시키고자 함(안 제8조제2항제5호의2 및 제10조의2 신설).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에 제5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의2. 제10조의2에 따른 광역버스운송사업의 운영에 대한 재정 지원
에 관한 사항

제1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조의2(광역버스운송사업의 운영에 대한 재정 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노선의 기능,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등을 고려하여 광역버스운송사업 중 광역교통위원회가 지정한 사업의 운영에 대하여 지원하는 경우 국가가 그 비용의 100분의 50을 부담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 그 나머지를 부담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비용을 관계 시·도가 부담하는 경우에는 분담율을 서로 협의하여 정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시·도가 부담하는 비용을 해당 시·도와 시·군 또는 구(자치구를 말한다)가 부담하는 경우 그 분담률은 시·도지사가 관계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과 협의하여 정한다.

④ 지방자치단체는 광역버스운송사업의 운영에 대한 지원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1항에 따른 각 지방자치단체의 비용 분담분

을 다른 사업에 우선하여 그 해 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여야 하는 비용을 해당 예산에 계상하지 아니한 경우 국가는 그 부담분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으며, 다른 광역교통시설에 대한 재정지원을 중단하거나 축소할 수 있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8조(대도시권 광역교통위원회 설치 등) ① (생 략) ② 광역교통위원회의 소관 업 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 5. (생 략) <u><신 설></u> 6. · 7. (생 략) ③ (생 략) <u><신 설></u>	제8조(대도시권 광역교통위원회 설치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 -----. 1. ~ 5. (현행과 같음) <u>5의2. 제10조의2에 따른 광역버 스운송사업의 운영에 대한 재 정 지원에 관한 사항</u> 6. · 7. (현행과 같음) ③ (현행과 같음) <u>제10조의2(광역버스운송사업의 운영에 대한 재정 지원) ① 국 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노선의 기능,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등을 고려하여 광역버스 운송사업 중 광역교통위원회가 지정한 사업의 운영에 대하여 지원하는 경우 국가가 그 비용 의 100분의 50을 부담하고, 지 방자치단체에서 그 나머지를 부담한다.</u> <u>② 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가 부담하는 비용을 관계 시 ·</u>

도가 분담하는 경우에는 분담
율을 서로 협의하여 정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시·도가 부
담하는 비용을 해당 시·도와
시·군 또는 구(자치구를 말한
다)가 분담하는 경우 그 분담
률은 시·도지사가 관계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과 협의하
여 정한다.

④ 지방자치단체는 광역버스운
송사업의 운영에 대한 지원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
1항에 따른 각 지방자치단체의
비용 분담분을 다른 사업에 우
선하여 그 해 예산에 계상하여
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가 부담하여야 하는 비용을 해
당 예산에 계상하지 아니한 경
우 국가는 그 분담분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으며, 다른 광역교
통시설에 대한 재정지원을 중
단하거나 축소할 수 있다.